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주 정책과 교육 혁신

글로벌 대학 연계와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Multicultural Settlement and Educational Innovation in Gangwon: Glocal University Strategi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박인옥*

국문요약 이 논문은 2026년을 전후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을 교육과 정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 혁신 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강원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조건 속에서, 다문화 가구와 이주민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미래 인적 자원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 정책의 체계화, 글로벌 대학 정책과 RISE 체계를 매개로 하여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한 정주 안정화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 인프라의 재구성, 이주배경 학생 교육 환경 개선,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둔 생활 정책은 정주를 장기적이면서도 세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강원지역의 사례는 다문화 정책이 복지 행정을 넘어, 지역 혁신과 사회 구조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심어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 정책, 정주, 글로벌 대학, 지역 소멸 대응, 교육 혁신

차례

1. 서론
2. 강원 지역 다문화 교육과 지원 정책의 주요 특징
3. 글로벌 대학 정책과 다문화 정주의 결합
4.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정주 안정화 전략
5. 결론

의 인구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출산을 저하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구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인구 구성과 생활 구조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강원도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복지 지원, 생활 적응 프로그램, 문화 교류 사업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² 이러한 정책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교육, 노동시장,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면서, 이주민의 지역 정

1. 서론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강원도 내의 다문화 가구 수는 1만 가구를 넘었다.¹ 이 수치는 수도권이나 광역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강원도

2 국립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방안』, 국립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0; 강원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강원여성가족연구원, 2017; 강원특별자치도회,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특별자치도회, 2020.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1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 통계로 보는 강원 다문화 현황. <https://www.kostat.go.kr>

주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 강원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³ 주목할 점은 이주민을 단순한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히 복지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 정책, 고등교육 개편,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주(定住)'와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핵심 과제로 삼아, 이주민과 그 자녀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 변화는 중앙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응한 교육 정책의 재편,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혁신을 연계하는 고등교육 정책, 지자체 주도의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⁴ 강원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단일 정책 영역을 넘어 복합적 정책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도 1국립대학 출범, 글로벌 대학의 정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 다문화 정주 정책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정책 실험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원도의 다문화 정책은 단순한 지역 사례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이 이주민 정책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교육을 매개로 한 정주 전략,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구조, 생활 세계에 밀착된 정책 설계는 향후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지원 정책'이라는 범주를 넘어, 지역 혁신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모색하는 정책 모델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강원 지역 다문화 교육과 지원 정책의 주요 특징

먼저 2026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강원 다문화 교육과 지원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6년을 전후로 전개되고 있는 강원도의 다문화 교육 및 지원 정책은 과거의 단편적이면서 보완적인 정책 수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⁶

특히 교육 정책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를 민관학(民官學) 협력 거버넌스 및 지자체 주도의 생활 밀착형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을 지역 혁신 전략의 일부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2장에서는 이러한 강원 다문화 교육과 지원 정책의 특징을 다문화 교육 정책의 체계화와 한국어 교육 강화,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확장, 지자체 맞춤형 생활 밀착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1. 다문화 교육 정책의 체계화와 한국어 교육 강화

2026년을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주배경 학생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교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인 수준으로 재편하였다. 기존의 다문화 교육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보조적 지원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다면, 새로운 정책은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이주배경 학생을 하나의 지속적 교육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문화 학생을 '추가 지원이

3 김규찬,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와 지원서비스 욕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2), 지방자치연구소, 2021, 301~332쪽.

4 교육부. 예를 들어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https://www.moe.go.kr>

5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4~17쪽.

6 박인옥·김민규, 「다문화가족의 주거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2, 133~156쪽.

필요한 예외적 존재'로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이 전제해야 할 학습자 다양성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⁷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다문화 교육의 초점을 단순한 성취도 보완이나 적응 지원에서 벗어나 언어, 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장기적 교육 목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주배경 학생이 단기간에 '일반 학생'의 기준에 맞춰져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던 기존 관행에 대한 반성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능력 향상 역시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의 습득이 아니라, 교과 학습 참여와 또래 관계 형성, 학교 공동체 내 정체성 구축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한국어 교육 정책의 운영 방식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을 상시적으로 모집 및 운영하고, 학교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는 단기 과전이나 임시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과 구별된다. 언어강사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외부 자원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과 일정 수준 결합된 교육 인력으로 기능하며, 담임 교사 및 교과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학생 교육을 학교 바깥의 보조 체계에 위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 내부의 책임과 역할로 환원시키는 방향성을 내포한다.⁸

또한 이러한 한국어 교육 강화 정책은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단기간의 언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속성 교육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학습 언어의 난이도와 교과별 언어 요구를 고려한 단계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이나 조기 탈락을 예방하는

동시에, 중등 교육 이후 진로 선택의 폭을 확장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 교육 정책의 체계화는 교원 인식과 학교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특정 교사나 담당 부서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학교 차원의 교육 과제로 인식되면서, 교원 연수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교육을 '추가 업무'가 아니라 오늘날 학교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과 맞물려 있다.

2.2. 민관학(民官學) 협력 거버넌스의 확장

2026년 1월 원주에서 개최된 다문화와 이민자 지원 관련 간담회는 강원지역 다문화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⁹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이나 문화 행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취업 연계, 직업 교육, 지역 산업과의 연결 가능성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이 복지 행정의 보조 영역을 넘어,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 교육 정책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확장이 자리하고 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시민단체, 산업주체 등이 다문화 정책을 매개로 연결되면서, 단일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주, 교육, 고용 문제를 분담 구조 속에서 다루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지역 정주 정책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작동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학 협력 구조의 특징은 정책 목표의 단기성과가 시성보다는 중,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7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damunhwa.gwe.go.kr>

8 김규훈,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정체성 교육 모형: 현상학적 생태 체계론(PVEST)을 기반으로」, 『국어국문학』 212, 국어국문학회, 2025, 37~65쪽.

9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정보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we.go.kr>

점이다.¹⁰ 취업 연계나 직업 교육 역시 단순한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 가능한 직무 역량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은 지역 경제 전략과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 놓여 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 시장의 재편,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다문화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 거버넌스는 정책 집행 과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에도 의미를 지닌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요구와 참여 주체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다층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 결과 다문화 정책은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것은 지역마다 상이한 산업 구조와 인구 구성,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3. 지자체 맞춤형 생활 밀착 정책

강원지역 다문화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의 강화이다. 원주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문화축제 개최, 지역 기반 안전망 구축 등 공동체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을 이주민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기보다, 지역 공동체 전체의 생활 환경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¹¹

생활 밀착형 정책의 핵심은 다문화 가구의 일상 경험을 정책의 중심에 놓는 데 있다. 언어 교육이나 취업 지원

과 같은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 가구의 고립을 완화하려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이 제도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 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인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정책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¹²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을 전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교육 및 지원 정책은 교육 체계의 내부화, 협력 거버넌스의 확장,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정책을 단순한 보완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소멸 대응 전략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글로벌 대학 정책과 다문화 정주의 결합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이 교육과 정주를 핵심 축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학은 단순한 협력 주체를 넘어 정책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을 전후로 추진되는 국립대학 통합과 글로벌대학 정책은 다문화 정주 정책과 구조적으로 결합되며, 지역 인구 구조와 인적 자원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이 더 이상 복지 행정의 하위 영역에

10 윤수진, 「민관학협력 사회혁신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혁신연구』 30(3), 교육발전연구소, 2020, 303~327쪽.

11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damunhwa.gwe.go.kr>

12 한종태·전유찬,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거환경 기반 생활밀착형 시설의 고령 친화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연구: 서울시 도봉구 중심으로」, 『공학기술논문지』 17(3), 공학기술연구원, 2024.

머무르지 않고, 고등교육 정책과 지역 혁신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 할 수 있다.

3.1. 통합 국립대 출범과 한국어 교육 인프라의 재구성

2026년 3월 출범을 앞둔 '강원 1도 1국립대' 통합 모델은 강원지역 고등교육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동시에, 다문화, 이주 정책과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접합되는 제도적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국립대학 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나 대학 규모 확장의 차원을 넘어, 지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유학생, 이주 인재는 대학 정책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고려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¹³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설정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역 정주형 한국어 교육 인프라의 구축이다. 이것은 기존의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이나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한국어 교육을 단순히 학업 준비 단계의 보조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주와 사회 참여를 전제로 한 장기적 교육 인프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어 능력을 학문 수행을 위한 기술적 조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 형성, 노동 시장 진입, 공동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통합 국립대 체제에서 한국어 교육은 특정 단과대학이나 부설 기관의 한정된 기능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교육 전략과 연동되는 영역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이 지역 내 이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이들의 정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로 기능하도록 재정립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센터의 운영 방

식 역시 기존의 단기 과정 중심에서 벗어나,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평생 교육 체계와 연동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 인식에도 중요한 전환을 요구한다. 대학은 더 이상 '졸업 이후 지역을 떠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길러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¹⁴ 다문화 가구의 자녀와 외국인 유학생, 이주 노동자 등은 이러한 전환의 핵심 대상이 되며, 한국어 교육 인프라는 이들을 대학과 지역 사회에 연결하는 주요 매개로 작동한다.

또한 통합 국립대 출범은 교육 자원의 공간적 재배치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캠퍼스 간 기능 분화와 역할 조정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특정 캠퍼스에 집중 배치되거나 지역 거점형 모델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지역 내 다문화 정주 거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학이 물리적, 제도적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RISE 센터와 지학(地學) 협력 모델의 형성

강원 라이즈(RISE) 센터의 본격 가동은 글로벌 대학 정책과 다문화 정주 정책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RISE 센터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매개하는 기구로서, 지역 혁신 과제를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 공헌 기능과 연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되면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범위는 교육을 넘어 정주 환경, 고용, 산업 연계로 확장되고 있다.

RISE 센터를 매개로 추진되는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은 단기적 유학생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인적 자원의 선별과 정착을 중시하는

13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14 정진근, 「글로벌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18~30쪽.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 수요자’로만 인식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역할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가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인구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주체로 재인식되고 있다.¹⁵

특히 주목되는 점은 RISE 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학(地學) 협력’ 모델이다. 이것은 지역(地)과 대학(學)의 관계를 단순한 지원과 수혜 구조가 아닌, 상호 의존적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개념적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정주 정책은 이러한 지학 협력 모델의 대표적 적용 영역으로 기능하며, 교육, 주거, 고용, 문화 정책이 대학과 지역 행정의 공동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학 협력 모델의 강점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강원지역은 지리적 분산, 산업 구조의 제한성,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동일한 방식의 다문화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다. RISE 센터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 자원과 연구 역량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 정주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RISE 센터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단절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문화 정책은 교육청, 지자체, 대학, 산업 주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는 영역인 만큼, 정책 목표와 실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 RISE 센터는 이러한 행위자 간 조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 정주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글로벌 대학 정책과 RISE 센터를 매개로 한 강원지역의 다문화 정주 전략은 고등교육 정책,

지역 혁신 정책, 다문화 정책이 교차하는 접합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정책 협력의 보조 주체가 아니라, 다문화 정주와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제도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강원지역 정책 모델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지닌다.

4.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정주 안정화 전략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이 교육과 고등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한편, 정주 안정이라는 목표는 일상생활의 구체적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가 좌우된다. 제도적 교육 정책이나 고용 연계 전략이 중, 장기적 정주 기반을 형성하는 장치라면, 생활 밀착형 정책은 이주민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관계, 정서적 안정, 자녀 교육과 같은 생활 세계의 문제는 정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정책 개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닌다.

강원지역의 생활 밀착형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을 독립된 정책 대상 집단으로 분리하기보다, 지역 주민과 동일한 생활 조건 속에서 공존하는 주체로 위치시키려는 방향성을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을 ‘특별 지원’이 아닌 ‘생활 환경 재설계’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시도이며, 정주 안정화를 지역 공동체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¹⁶

15 박웅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여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77, 부설법학연구소, 2025, 315~350쪽.

16 박인옥, 「다문화 멘토링의 운영과정과 활동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강원도 지역 K대학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9(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171~192쪽; 박인옥·김민규, 「강원도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활동의 실태 분석」, 『열린교육연구』 21(4), 한국열린교육학회, 2013, 227~248쪽; 임운,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교원교육』 33(4), 교육연구원, 2017, 1~24쪽.

4.1. 모국 방문 지원과 정서적 안정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은 강원지역 다문화 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은 소득 보전이나 주거 지원과 같이 즉각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는 달리, 정서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비가시적 영역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를 수치화하거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주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주 이후 언어,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원가족과의 물리적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의 불안정, 자녀 양육의 어려움, 지역 사회와의 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국 방문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현재의 생활 공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원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 규모의 모국 방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며, 강원지역이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⁷ 특히 농촌 지역이나 접경 지역과 같이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정서적 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정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봉화군을 비롯한 인접 지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모국 방문 지원은 단순한 복지성 지출을 넘어 지역 정주 정책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를 ‘이미 정착한 인구’로 간주하는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정주 과정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관계적 불안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국 방문 지원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간접적인 효과를 지닌다. 결혼이민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강화되며, 이것은 지역 공동체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이러한 정서적 기반이 취약할 경우, 이주민은 지역 사회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한 채 폐쇄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하게 될 위험이 크다. 모국 방문 지원은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의미는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정주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공간을 삶의 지속적 기반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조건을 포함한다. 모국 방문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이중적 정체성과 감정 상태를 인정하고, 이를 억압하거나 교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화 중심 다문화 정책과 구별된다.

4.2. 이주배경 학생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정주의 세대적 재생산

정주 안정화 전략에서 또 하나의 핵심 영역은 이주배경 학생을 둘러싼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주민 가구의 정주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만 달려 있지 않으며, 자녀 세대가 지역에서 어떤 교육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장기적 정주 가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은 단기적 학습 성취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세대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원 인력 확충과 특화 교육 모델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학생을 개별 학

17 박인옥·김민규, 「다문화가족의 주거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2, 133~156쪽.

교의 특수 사례로 취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 체계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원 인력 확충은 단순히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의 경우, 언어 지원, 학습 보조, 생활 지도 등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를 기존 교원 인력으로 감당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나 교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원 인력 확충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과 비(非)다문화 학생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또한 특화 모델 운영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원지역은 학교 간 규모 차이가 크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조건에서 획일적인 다문화 교육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를 지닌다. 지역 재정 인프라와 연계한 특화 모델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이것은 다문화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주배경 학생 교육 인프라 확충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정책이 결합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교육부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방침이 지역 재정과 행정 역량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강원지역은 자체적인 교육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지방 관계 속에서 지역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정책 실험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주 안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배경 학생 교육 정책의 핵심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있다. 자녀 세대가 지역 교육 체계 안에서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이주민 가구가 장기 정주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교육 격차가 구조적으로 방치될 경우, 이주민 가구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¹⁸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지역의 이주배경 학생 교육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정주 정책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은 정주를 현재 세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사회적 이동 경로와 삶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 밀착형 다문화 정책은 정주 안정화를 개인의 적응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정서, 가족, 교육이라는 생활 세계 전반의 조건을 재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국 방문 지원을 통한 정서적 안정, 이주배경 학생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대적 지속성 확보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을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의 보조수단이 아닌, 지역 사회 재구성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2026년을 전후로 전개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복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 취업, 정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 정책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가구와 이주민을 단기적 지원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된 강원지역의 조건 속에서, 다문화 정책은 더 이상 주변적 정책 영역이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의 중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18 박해옥, 「생활권의 주거의 질이 정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대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2(3), 한국지역경제학회, 2014, 193~214쪽.

강원지역 다문화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주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육 정책과 고등교육 개편, 지역 혁신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민과 다문화가구의 정주 안정은 단순히 주거 지원이나 생계 보조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언어 교육, 자녀 교육, 고용 기회, 지역 공동체 참여 등 다층적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은 이러한 복합성을 전제로 하여, 학교 교육과 대학 정책, 지자체 행정과 지역 사회의 역할을 상호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학 정책과 RISE 체계를 매개로 한 대학의 역할 확대는 다문화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역과 분리된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라, 이주민 교육과 정주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재정립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 정책이 고등교육 정책과 결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어 교육 인프라의 재구성과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이러한 전환의 구체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 인프라 확충은 정주 안정화 전략의 미시적 기반을 형성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모국 방문 지원은 정주를 물리적 거주 문제와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주배경 학생 교육 인프라 확충은 정주가 세대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 가구를 지역 공동체의 외부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 전환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교육, 정주, 고용을 연계하는 통합 정책이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

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주 안정은 제도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강원지역 내부에서도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른 정책 효과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은 복지 중심 정책에서 지역 혁신 전략으로 확장되는 전환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교육과 대학 정책, 생활 밀착형 지원을 결합한 정주 중심 접근은 인구 감소 지역이 다문화 정책을 통해 사회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정책과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원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강원여성가족연구원, 2017.
- 강원특별자치도회,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특별자치도회, 2020.
- 국립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방안』, 국립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0.
- 김규찬,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와 지원서비스 욕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공공정책 연구』 38(2), 지방자치연구소, 2021.
- 김규훈,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정체성 교육 모형: 현상학적 생태 체계론 (PVEST)을 기반으로」, 『국어국문학』 212, 국어국문학회, 2025.
- 김봉규,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 온스토리, 2023.
- 박승우, 『다문화 교육과 정책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19.
- 박웅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여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77, 부설법학연구소, 2025.
- 박인옥, 「다문화 멘토링의 운영과정과 활동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강원도 지역 K대학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9(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 박인옥 · 김민규, 「강원도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활동의 실태 분석」, 『열린교육연구』 21(4), 한국열린교육학회, 2013.
- , 「다문화가족의 주거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2.
- 박해운, 「생활권의 주거의 질이 정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대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2(3), 한국지역경제학회, 2014.
- 윤수진, 「민관협력력 사회혁신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혁신연구』 30(3), 교육발전연구소, 2020.
- 임은,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교원교육』 33(4), 교육연구원, 2017.
-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 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정진근, 「글로벌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한종태 · 전유찬,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거환경 기반 생활밀착형 시설의 고령 친화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연구」, 『공학기술논문지』 17(3), 공학기술연구원, 2024.

2. 기타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정보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we.go.kr>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damunhwa.gwe.go.kr>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damunhwa.gwe.go.kr>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 통계로 보는 강원 다문화 현황.

<https://www.kostat.go.kr>

Abstract

Multicultural Settlement and Educational Innovation in Gangwon

Glocal University Strategi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Park, In-Ock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multicultural policies i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ound 2026, focusing on education and settlement, 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decline and rapid aging, Gangwon has redefined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migrants not simply as welfare recipients but as key human resources for addressing regional extinction.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major policy features. First,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systematized through sustain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ong-term academic support for students from migrant backgrounds. Seco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emerged as central actors in settlement strategies through glocal university initiatives and the RISE framework, strengthening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Third, life-oriented support, including emotional care and improv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has helped stabilize settlement conditions. The Gangwon case shows how multicultural policy can move beyond welfare toward a broader strategy of regional sustainability, demographic resilience,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Keywords Gangwon Province, Multicultural Policy, Settlement, Glocal University, Regional Decline, Educational Innovation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